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975
----------	-------

발의연월일 : 2022. 10. 28.

발 의 자 : 김민석 · 강득구 · 강민정
김성주 · 김수홍 · 김홍걸
김희곤 · 문진석 · 박 정
정춘숙 · 조응천 · 최혜영
홍정민 의원(13인)

제안이유

최근 스톱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잠정조치기간 연장,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 형벌 부과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피해자보호명령사건으로 정의하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으로 함(안 제2조제5호 및 제17조의2 신설).
- 나. 스톱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제5

항).

다.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금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법원에 출석·귀가 시 동행 등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17조의3 신설).

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기간 연장이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17조의4 신설).

마.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함(안 제17조의5 신설).

바.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법령위반 등이 있는 경우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등은 항고할 수 있음(안 제17조의7 신설).

사. 미성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아.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스톱킹범죄로 인하여 제17조의3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제9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2개월”을 각각 “3개월”로 한다.

제18조 앞의 “제3장 벌칙”을 “제4장 벌칙”으로 한다.

제3장(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8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제17조의2(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스톱킹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제17조의3(피해자보호명령)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톱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

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귀가 시 동행
2.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3.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4.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의5(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7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제17조의6(이행실태의 조사) ① 법원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

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의7(항고와 재항고) ① 제17조의3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1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17조의5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②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8(위임규정)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흥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20조의 제목 중 “잠정조치”를 “잠정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7조의3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17조의5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잠정조치 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u>“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제17조의3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u>
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 ④ (생략)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u>2개월</u> ,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u>2개월</u> 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u><신설></u> <u><신설></u>	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3개월</u> ----- ----- -----. ----- ----- ----- ----- ----- ----- <u>3개월</u> ----- -----. <u>제3장 피해자보호명령</u> <u>제17조의2(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u>

<신 설>

의 관할은 스토킹행위자의 행
위·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
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
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
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제17조의3(피해자보호명령) ① 판
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
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사
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
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
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
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
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귀가 시 동행
2.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3.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신 설>

<신 설>

4.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의5(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

<신 설>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7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제17조의6(이행실태의 조사) ① 법원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스토킹 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신 설>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의7(항고와 재항고) ① 제17조의3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1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17조의5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②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2조 제2항,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신 설>

제3장 벌칙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생 략)

② 흥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③ (생 략)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8(위임규정) 피해자보호 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벌칙

제18조(스토킹범죄)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흥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하여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잠정조치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p><u><신 설></u></p> <p><u><신 설></u></p> <p>제21조(과태료) ① <u>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u>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생 략)</p>	<p><u>한 사람</u></p> <p>2. 제17조의3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17조의5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p> <p>② <u>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제21조(과태료) <u><삭 제></u></p> <p>② (현행과 같음)</p>
---	---

<p>③ <u>제1항 및 제2항</u>에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이 부과·징수한다.</p>	<p>③ <u>제2항</u>----- ----- ----- -----.</p>
--	---